

정책지원·규제혁파로 드론산업 더 높이 비상

-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3~'32), 규제혁파로드맵 2.0 마련
-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확대지정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미래 일상생활 속 드론활용과 글로벌 드론강국 도약을 견인해 갈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3~'32)”과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2.0”을 마련하고 이와 함께 규제 없이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도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한 도심지 드론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드론교통관리시스템(UTM*), 배송로, 이·착륙장 등을 구축하고, 드론보험상품 다양화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여,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드론배송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 이를 기반으로 2032년에는 다양한 드론생활서비스가 정착되도록 추진하며, 그 외에도 신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등 다양한 산업육성 방안도 담고 있다.
 - * Unmanned aerial system Traffic Management : 실시간 비행승인, 교통관리 등
- “선제적 규제혁파로드맵 2.0”은 기술발전에 뒤쳐진 낡은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 안전성인증 등의 간소화와 함께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화가 어려웠던 의약품 배송 등도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 규제혁파로드맵 1.0('19)의 진행과제 15개에 25개 신규과제를 더해 총 40개 과제 선정
- 아울러,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기존 운영 중인 29개 구역에 18개 구역*을 추가하여 올해 7월부터 총 47개 구역으로 확대 운영(매 2년 단위 갱신)한다.
 - * 부산(2), 충남서산(3)·금산(2), 전북전주(1)·남원(1), 전남나주(3)·여수(2)·구례(3), 경북구미(1)
-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되는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과 규제혁파로드맵2.0을 통해 세계 9위권인 국내 드론산업 규모를 세계 5위로 끌어올려 드론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면서,
 - “지속적인 산업발전 지원 및 적극적 규제개선과 함께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정책을 유연성 있게 끊임없이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항공정책관 첨단항공과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1-4307)
		담당자	사무관	이석진 (044-201-4253)
			사무관	백병성 (044-201-4315)
			사무관	남기영 (044-201-4226)



참고 1

제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주요 내용

1 도심 안전운용체계 마련, 상용화 실증 등으로 도심배송 실현

- 제주 가파도, 성남시 도심공원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배송실증을 통해 '23년 말까지 안전관리, 배송비행로 등 드론배송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 드론교통관리시스템('27년), 고층건물 배송주소('28년) 등 인프라 구축과 배송보험 개발, 비가시권 비행규제 완화 등 사업자 부담 경감으로 도심배송 조기 실현

- ☞ (2027년) 도서벽지에서 시작된 드론배송이 도심지로 점차 확산
- ☞ (2032년) 드론+로봇 협업 등 도심 고층건물 내부까지 드론배송



2 드론레저 신시장 창출, 해외진출 지원으로 글로벌 드론강국 도약

- 드론공원 확충, 국제 드론레포츠 대회 유치 등 드론레저 저변확대로 **新시장**이 창출되고, 해외 진출기업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점유율 향상
- 우수기업 규제면제·실증지원 등 역량강화로 글로벌 대표기업 육성

- ☞ (2027년) 드론레포츠가 e-스포츠처럼 관람·중계 등 본격 스포츠산업화
- ☞ (2032년) 현재 연간 30억원의 수출규모가 1,000억원으로 증가



3 자율비행, 성층권드론 등 신기술 개발로 K-드론 경쟁력 강화

- 부처간 협력으로 AI자율비행, 성층권드론, 첨단통신기술 등 빠른 신기술 개발
- 드론데이터 민·관 공동 활용으로 하늘길 최적화 등 국민편익 증진

- ☞ (2027년) 통신·부품 등 우리기술 다수를 국제표준으로 채택
- ☞ (2032년) 원천기술 개발로 해외에서 로열티를 받는 기업 증가



4 종합안전관리 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 미래산업 준비

- 드론운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종합안전관리로 비행안전 우려가 저감되고,
- AI+자율비행 등 융·복합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으로 기술인력 수급 안정

- ☞ (2027년) 드론비행 불안감 해소로 다양한 활용서비스 가능성 확대
- ☞ (2032년) 풍부한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글로벌기업 출현



참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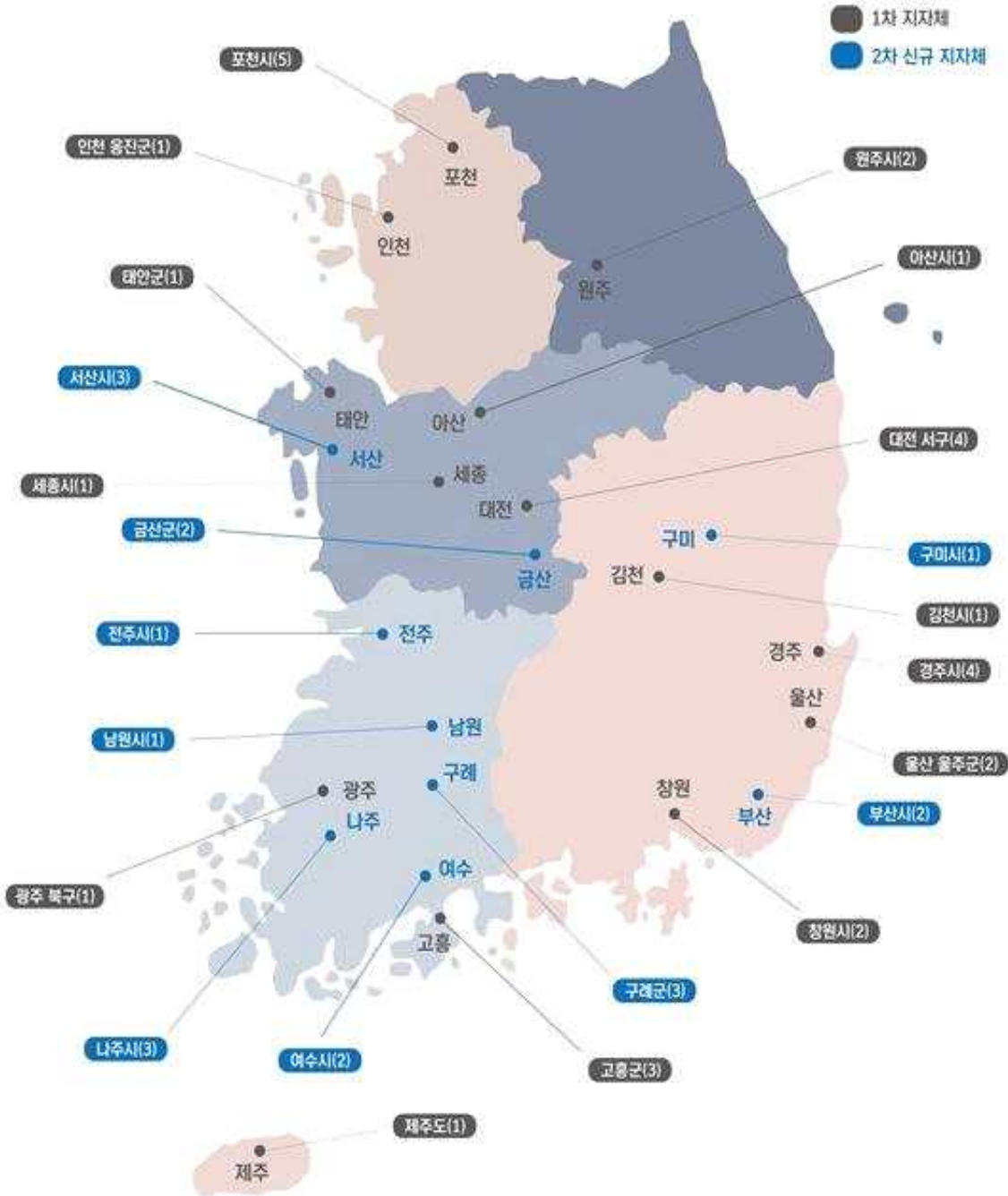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2.0 주요 추진과제

분야	추진 과제	현행	개선	시기
인프라 기반 조성	특별비행승인 요건 개선	○야간·비가시권 비행시 특정장비 장착 요건 등 업계에 부담	○특별비행 승인요건을 특정장비 장착에서 성능·기능 요건으로 개편, 행정절차도 간소화	'23
	드론공원 지정 근거 마련	○도심지에서 자유롭게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	○취미·레저활동 장려 및 안전한 비행이 가능한 드론공원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24
	드로교통관리체계 실증 및 구축	○드론비행 수요 증가에 비행계획, 비상대응 등 종합관리체계 부재	○연구개발 및 실증을 거쳐 드론 교통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기준 마련	'27
	드론비행승인 자동화체계 구축	○비행수요 증가에 따라 이용편의를 위한 승인 체계 필요	○실시간 비행승인처리가 가능한 드론 자동비행 승인체계 구축	'28~
활용 서비스 고도화	우수기업 발굴 및 육성 기준 마련	○드론 활용사업이 확대 되고 있으나, 대다수 드론기업이 영세한 상황	○기술·서비스 역량을 갖춘 우수 기업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행 정·재정적 우선 지원	'23~
	드론배송 배달점 지정 확대 및 관련 설비규정 마련	○드론배송 상용화를 위한 기반 마련 필요	○드론 배달점을 단계적으로 지속 확대하고, 배송을 위한 설비 근거 및 설치기준 등 마련	'23~
	공공용 긴급드론 활용 특례대상 확대	○공공용 긴급드론 운용시 비행승인면제 등 특례 부여 (국가지자체, 22개 공공기관)	○수색·구조, 화재진화, 시설점검 등 공공용 긴급드론 활용 특례대상 확대	'24
	드론 정비업 신설	○드론정비사업에 대한 등록요건 등 미비	○드론 정비업을 신설하고, 사업 특성을 반영한 등록요건을 규정, 정비 서비스 품질 향상	'25
	드론 배송 사업 근거 및 사업자 안전기준 마련	○드론배송 실증 확대 및 기술발전 등 감안, 상용화 운영기준 필요	○드론 배송사업 근거 및 운영기준 (안전요건, 조종자격 등) 마련	'27
차세대 운용체계 마련	드론 분류체계 개선	○새로운 형식의 비행체 (수직이착륙기 등) 개발에 따른 제도 개선 필요	○신비행체 개발·도입에 대응하여 분류체계 및 자격제 개선	'24
	무인항공기 운영체계 마련	○ICAO 중심으로 무인 항공기 관련 국제표준안 마련 논의중	○무인항공기에 대한 국제표준안 논의에 맞추어 무인항공기 관련 국내 기준 마련	'26
	유인항공기 공역 내 무인항공기 통합 운영체계	○유인항공기 관리체계 내 무인항공기 통합운영을 위한 교통관제 절차 필요	○유인항공기 항공교통 관제절차를 준용토록 하고, 통신단절·충돌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운영절차 마련	'28

참고 3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현황

< 총 23개 지자체, 47개 구역 >



수도권(6)	포천(5), 인천 용진군(1)	김원권(2)	원주시(2)
호남권(14)	광주 북구(1), 고흥(3), 전주(1), 나주(3), 여수(2), 구례(3), 남원(1)	충청권(12)	대전 서구(4), 세종(1), 아산(1), 태안(1), 서산(3), 금산(2)
제주(1)	제주도 전역(1)	영남권(12)	울산 울주(2), 창원(2), 김천(1), 경주(4), 부산(2), 구미(1)

* (괄호안)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수